



**계유년 양계업,
수입개방 실전 연상케 했다.**

양계산업이 장기불황으로 인하여 마치 가랑비에 옷젖듯 기반이 부실해지는 것으로 결산이 되고 말았다.

많은 양계인들이 지구상의 이상기온 현상에 대해서는 놀라와 하면서도 진작 양계산업의 이상현상에 대해서는 그다지 놀라는 기색이 없는 것으로 보여 대조를 이루었다. 불황 뒤에는 호황이라는 기대가 연초부터 무너지면서 양계업은 역풍에 시달리기 시작하였다.

이유야 어쨌든 양계산업이 불황이라는 유행 불 속에서 1년동안 속을 끓여가며 지속해야만 했던 것은 소비부진이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이다. 더러는 생산이 과잉이 되어서 결국 양계업자들은 껍데기만 남은 농장을 지켜야 했다고 하지만 이는 사료생산실적을 분석해 보면 좀

궁색한 변명이랄 수 밖에 없다.

금년 10월까지의 집계를 인용해 보면 양계용 총 사료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0.3%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정체되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가장 말이 많았던 종계업도 사료실적으로 보면 오히려 0.4%가 증가하여 저가 병아리시세 속에서도 끝까지 버텨 보겠다는 의식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계란생산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영양란, 위생란 등이 부각되면서 상당한 소비증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산란사료가 5% 정도가 증가하여 다른것에 비해 폭은 컸으나 소득 면에서는 매우 불리한 입장에서 찢찢매는 수모를 당하였다.

육계는 세계적으로 소비가 대폭 증가하는 양상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증가를 나타내지 못하고 1% 정도가 감소하여 어려움이 더욱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고 작년의 수준이 높았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하다. 이에

반해 대다수의 육계업자들은 닭고기 소비는 매년 저절로 증가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비창출 없이 그저 막연한 기분으로 입추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교훈이 어떤 결과를 빚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할 때이다. 계열화사업이 날로 번창하여 무한정 소비를 늘려줄 것이라는 기대는 금년의 경기 흐름으로 보아서 자제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규농가가 우후죽순격으로 참여하여 생산과잉을 부추겼다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으나 사료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서 일부지역에 편중된 현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실제 수입산물과 거의 비등할 정도로 가격이 장기간 지속되어 전 양계업을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료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소비부진과 입추의 분산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입추가 일시에 몰리면 어쨌든 과잉으로 이어져 다음 경기에도 압박을 가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 점을 양계인들은 주시할 필요가 있다.

닭고기 대외경쟁력,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간 UR농산물 협상이 금방이라도 타결되어 우리나라 농산물이 지리멸렬 할 것처럼 떠돌석하다가 EC의 강력한 불만에 부딪쳐 타결이 늦어지자 세계는 다시 지역을 위주로 경제블럭화를 추진하면서 또다른 양상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EC가 통합되고, NAFTA 시행법안이 통과되자 이번에는 미국이 주도하여 APEC(아·

태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사실상 우리나라는 개방정책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농산물과 서비스 부분은 어떤 협상에서건 늘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고 불안감을 느끼는 농민들은 정부의 강력한 대처만을 기대할 따름이었다.

UR협상과정에서 정부는 쌀 및 14개 NTC 품목 개방은 EC 및 일본과 함께 단호히 막겠다고 천명한 바 있으나 이번 APEC회의를 전후하여 일단 일본이 쌀의 개방을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시사하자 우리는 다급한 나머지 쌀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와 함께 NTC품목중 쇠고기, 보리, 고추만을 제외하고는 관세화를 통하여 11개 품목을 자유화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협상안이라는 것이 언론에 연일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1개 NTC품목중 닭고기와 돼지고기의 경쟁력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어 서열에서 맨앞에 있다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를 접하면서 많은 양계인들은 차고 쓰라린 감정을 느끼고 말았다.

닭고기의 경우 현 단계에서 태국을 기준하여 경쟁력을 가질려면 100%의 관세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타당성을 조사했다는 농촌경제연구원의 대답은 명확한 자료를 낸적이 없다는 간접적인 부인을 보면서 정부는 무엇을 근거로 하여 닭고기가 대외경쟁력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판단을 했는지 의문이 간다.

아직 계열화사업이 전체 시장의 30% 선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시행업체도 부도를 내는가 하면 자금동원에 시달리고 있는 실

정이다.

양계업자들이 바라는 것은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나타나는 것이다. 만일 정부가 닭고기의 대외 경쟁력 방안을 모색했다면 즉각 생산자에게 그 방법을 제시하여 생산에 임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쌀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나무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대안도 없는 여타 농축산물 개방화가 시대의 흐름이라 하여 개방한다면 결국 쌀도 쇠고기도 끝내는 수출국의 입김으로 개방하지 않을 수 없음을 우려하게 된다.

양계업자라고 수입개방의 추이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부의 대안들이 너무 졸속하기 때문에 어느 쪽을 믿고 따라야 할 기준이 없어 우왕좌왕 하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개방이 되어 국내양계업이 경쟁력이 없어지면 정부가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육성한 농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하여 농정을 펴야 할 것이다.

**종축개량 종합대책,
생산성제고의 초석으로 봐야
한다.**

닭의 개량은 사실상 엄청난 발전을 한 것이 세계적인 추이다. 불행히 우리나라는 경제성이 뛰어난 닭의 개량을 추진하기는 커녕 세계적인 육종회사들이 만들어낸 상품을 가지고도 제 성능을 다 발휘시키지 못하는 입장에 처해있다. 닭의 육종개량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지난 11월호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이번 11월 19일

정부가 종축개량 종합대책을 수립코자 공청회 때 제시된 대책안을 보면 닭의 경우 사실상 개량 보다는 수입계에 대한 검정계획만 있어 그간의 정책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전적으로 민간주도에 맡기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겠다는 발상인데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보아서 민간업자가 수익성이 높지 않은 닭의 육종개량에 얼마나 뛰어든다가 의문이다. 일전에 벌어진 마니육종의 예가 이를 잘 뒷받침하고 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농촌진흥청이 닭의 육종 체계를 무시하고 체모색으로 종계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와 닭의 육종개량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인정되어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차라리 초보적인 단계라 하여도 육계의 경우는 재래계의 소비가 급증하는 편이다. 종축개량이 유전자원의 확보, 외국 종계회사의 확보 방지를 위해 국가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보다 장기간 투자사업을 상업성이 약한 상황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일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닭의 경우 우선 국내 시장이 좁고, 외국 육종개량기술이 한차원 높아 당장 상업성에서 밀리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까지 가는 데는 정부가 종자보급이라는 차원에서 투자한다는 대안이 있어야 했다.

결국 닭의 개량은 개량이 아닌 외국계의 능력만을 평가하는 것이 종축개량의 전부인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새로운 계획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계**